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2018. 1.18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순서

1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2 2018년 중소기업 정책 여건

3 2018년 중점 추진과제

① 중소 · 벤처 · 창업분야 일자리 창출강화

②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매출 · 소득 증대

③ 소상공인 · 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④ 정책 및 업무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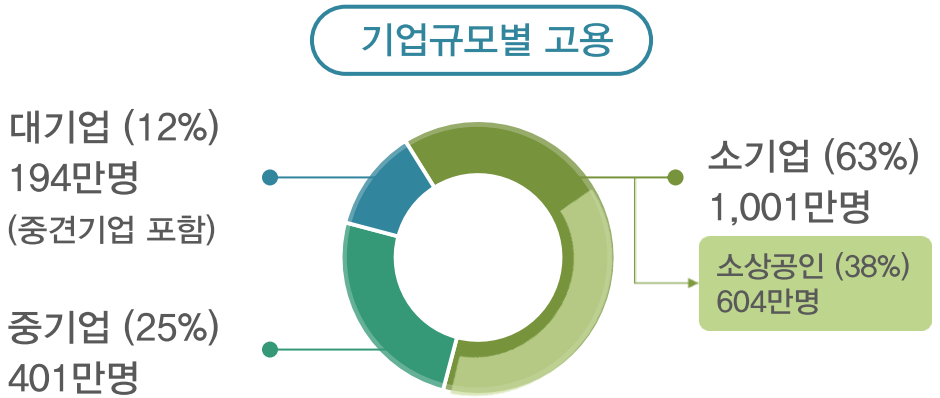
1.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삶과 활동무대

중소기업 1,402만명

對

대기업 194만명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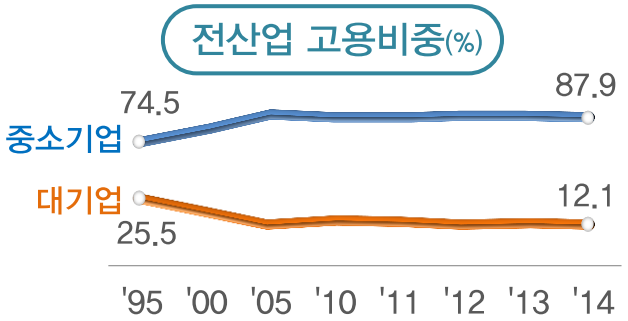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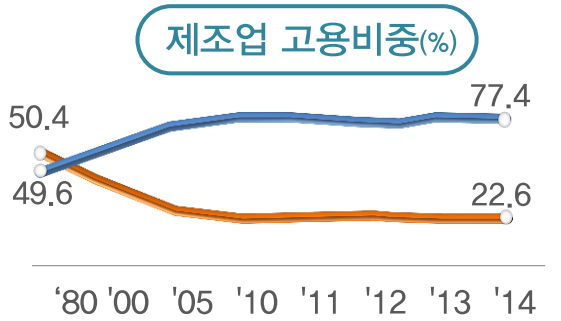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 증가

반면,
대기업 고용비중 지속 감소
(95년 : 25.5% → 14년 : 12.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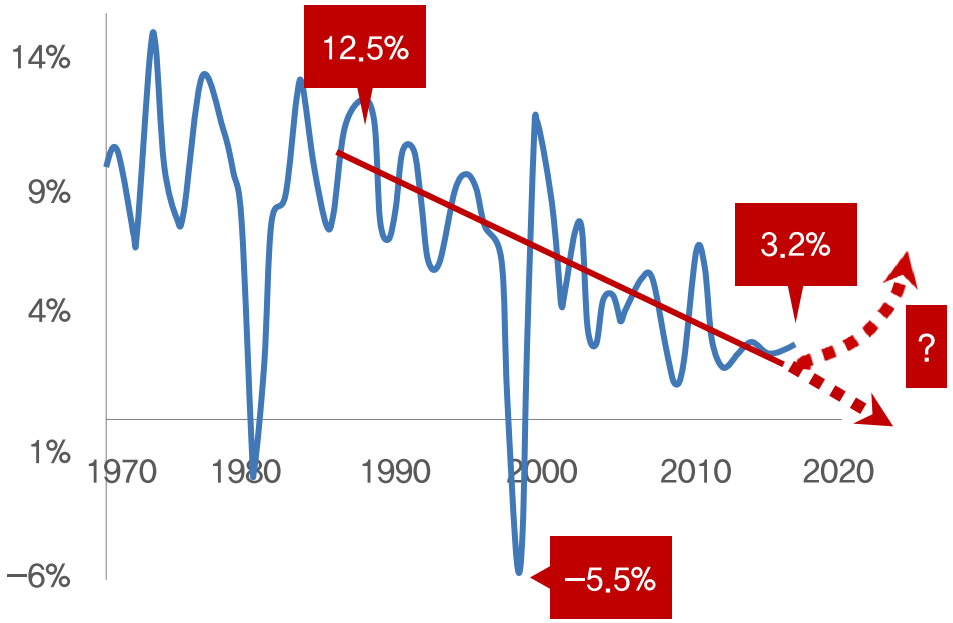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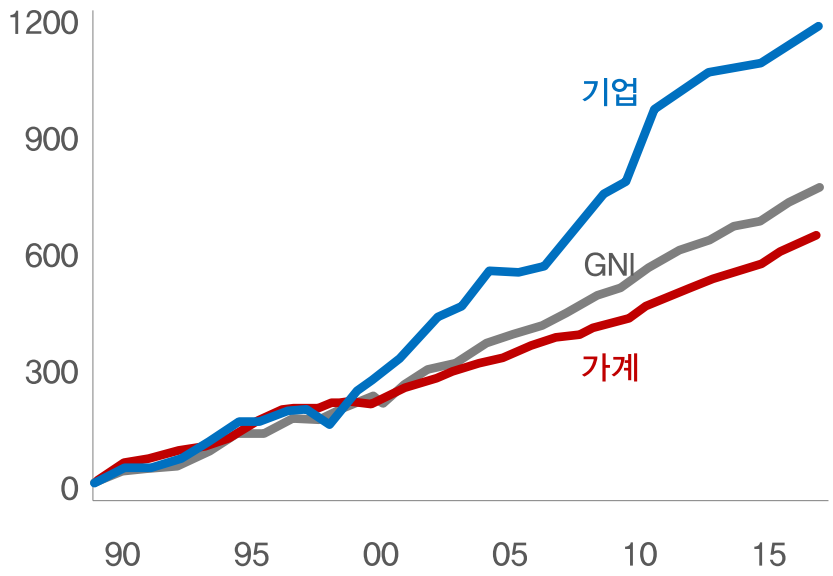
【지금 우리의 모습】

세계화 · 기술진보 이후 저성장, 양극화 심화

경제성장률 추이(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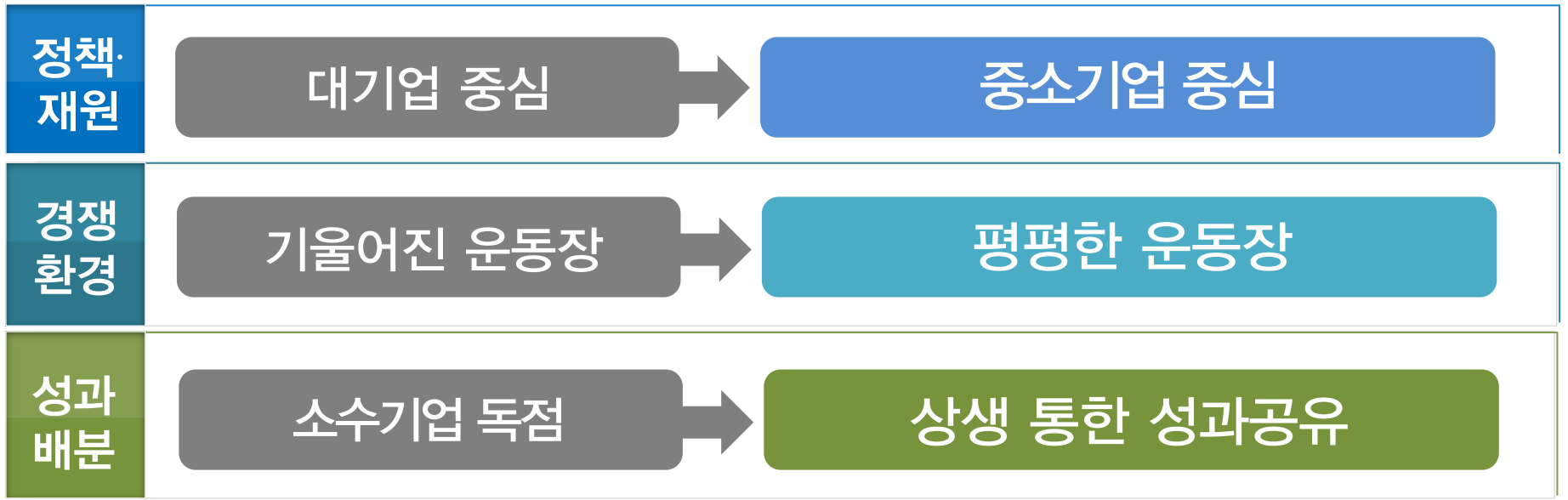
기업−가계 간 소득증가 추이('90년=100, 한은)



대기업 중심 경제에 따른 소수기업 독점으로 환경변화 대응 한계

대기업 중심 재원 배분 (세제 지원, 전기요금 등)	기울어진 운동장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 (대규모 점포 출점, 생계형 업종 진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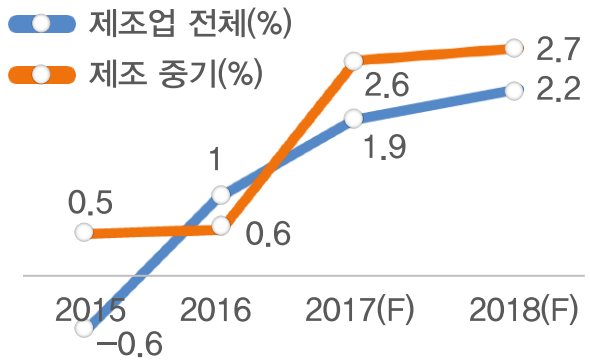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추세를 바꿀 필요



2. 2018년 중소기업 정책 여건

경기 전망 : 성장세

중소제조업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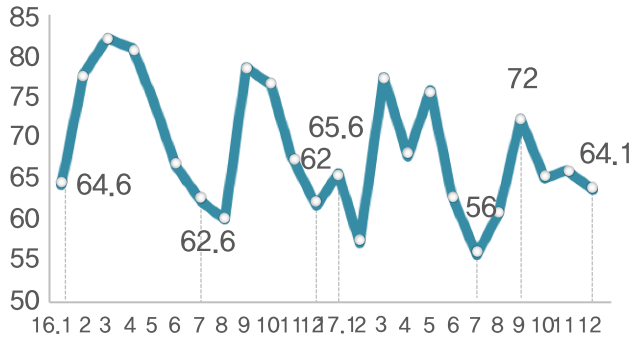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중기연

국정과제 실천 등을 통해
성장 전망을 현실화

업 계 : 체감도 정체

소상공인 BSI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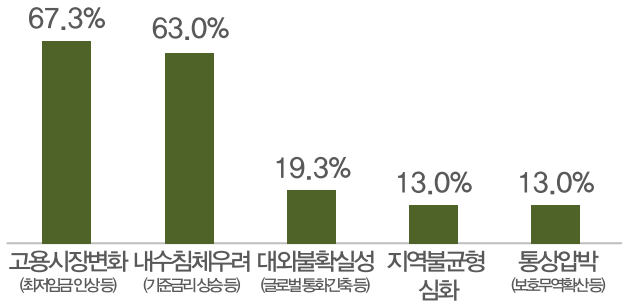


* 자료 : 소진공

정책성과 창출 등을 통해
현장 체감경기를 호전

도전 요인

-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등



* 자료 : 중기중앙회('17.12)

현장소통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성과 달성 추진

3. 2018년 중점 추진과제

중기부 주관 : 5대 국정과제, 21개 세부실천 과제 ⇒ 차질없이 실행



이번 보고는 '일자리 ·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4개 과제 보고





첫째

중소 · 벤처 · 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창업·벤처는 일자리 원천, 그러나 일자리 지속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미흡

창업 ·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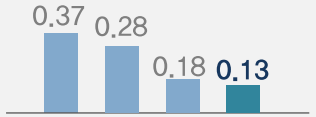
* 창업기업 연평균 **119만명 일자리 창출**

(05~14년, 사업체통계조사, 창업경영연구원)

우수인력 창업저조

* 석 · 박사급 창업 비중 5.3%

선진국 대비 벤처투자 저조



* GDP 대비 투지 비중(%)

재도전걸림돌 상존

* 연대보증 등
* 폐업 기업 대표자 부담 3.6억원 (17년, 중기부)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면 개편

실천과제

①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② 창업 활성화

③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④ 재도전 지원



실천과제 1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 적극 뒷받침

일자리 창출 기업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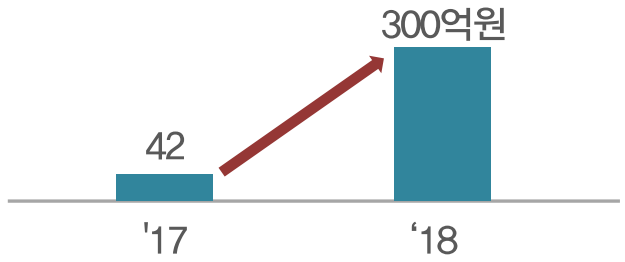
- 일자리 평가지표 도입

37개 사업(5.8조원)에 적용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1,000억원)
-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제도' 운영
  (42억원→300억원)



* 우대내용 : 전액보증(90%보증→100%), 0.5% 고정보증료 적용 등

일안자금 수혜기업 우대

정책자금, R&D, 마케팅 등 지원제도 우대
(가점 부여, 한도 확대 등)

- 일안자금 현장 홍보 추진

찾아가는 홍보 (229개 현장홍보전담반) + 스크럼방식 홍보 (4천여개 기관, 1만명 참여) + 밀집지역 집중홍보 (상점가, 보육단지 등)

실천과제 2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창업 인프라 개선(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

- 다양성 · 자율성 · 개방성이 보장되는 지역별 혁신 창업 허브로 개편

다양성	센터별 특화, 투자기능 부여 등
개방성	대기업 중심 → 대학 · 벤처 등 참여주체 확대
자율성	프로그램 자율 운영 등

- 성과 우수 센터에 집중 지원

지역 혁신 창업클러스터 집중 지원

- 지역 혁신주체들의 자율적 협력체계 구성 추진
  - 대학(원)생, 연구원, 벤처기업 인재들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
  -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창업 · 투자 지원
- '18년 정부 출연연 등 기술 · 인력 기반이 우수한 지역에 시범 추진(1~2곳)

손쉬운 제작 · 창업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 국민 누구나 창작, 창업을 시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신설('18, 65개소)
-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플랫폼 등 인프라 지원과 메이커 문화행사 등 운영

우수인력 창업 촉진

- 기업의 우수 기술인력 창업지원을 위한 사내 창업프로그램 신설

모기업 선투자 + 정부 매칭 지원

-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활성화 기반 구축

실천과제 3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로 자금 공급 확대

정부주도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 '민간(수요자) 제안 방식' 도입

  * 민간이 투자분야 先제안 → 정책목적에 부합 시 모태펀드 매칭

- 콜옵션 확대 등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운영

➡ 민간 자금 유입확대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공공부문(재정 · 정책금융 등) 3.7조원 출자 + 민간부문 6.3조원 출자

➡ '18년에 1차로 2.6조원 조성 추진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규제 완화 등 반영

-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일원화 및 투자제도 체계화



- 민간자본 진입규제 및 투자규제 완화

진입규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 등
투자규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 범위 · 방식에 대한 규제 최소화

실천과제 4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재도전 걸림돌 제거

연대보증 폐지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추진

기존	→	개선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모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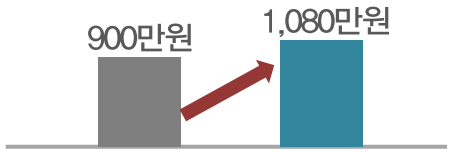
- 연대보증 대안시스템인 '책임경영심사' 도입 –〉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병행

실패 채무 감면

-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중진공 · 기보 · 지역신보 등)

채무감면 범위 확대 (이자 → 원리금) + 분할상환 기간 확대 (5년 → 10년 이상)

- 압류제외 최저생계비 확대(900→1,080만원),
  세금 체납처분 유예대상 확대(3→5천만원, 성실경영평가통과자)



압류제외 최저생계비 확대

재도전 지원프로그램 강화

-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지원프로그램 신설

1년차 →

엔젤투자 0.5억원 + 엔젤매칭펀드 1억원

← 2년차 →

사업화 1억원 + R&D·마케팅 2억원

- 재기지원펀드 조성 · 투자(3,155억원)
-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확대('17, 9개 → '18,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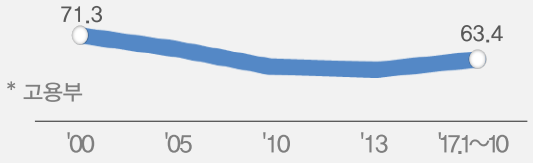
둘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매출 · 소득 증대

양극화 심화 등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에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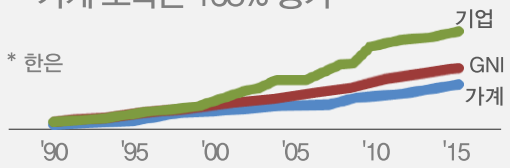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여전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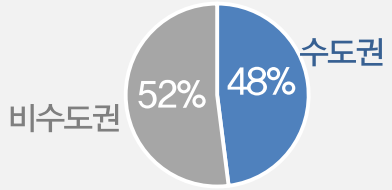
가계-기업 소득격차 확대

* '00~'16년간 기업소득은 255% 증가, 가계 소득은 138% 증가



수도권 집중 현상

* 기업 지역 분포 현황



* 통계청

→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실천과제

① 대 · 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확산

② 기업-근로자간 근로보상 강화

③ 수도권-지역간 균형성장



실천과제 1 대-중소기업간 :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격차 축소

(대기업-1차 협력사) 협력이익배분제 도입('18.상)

이익공유 기준 제시	대기업이 목표한 매출 · 이익을 초과달성 ⇒ 협력업체 기여 정도와 방식에 따라 현금 공유 기준 설정
인센티브 부여	도입한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등

(1차-2·3차 협력사) 상생 확산

-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납품대금 만큼 2차 협력사에 결제 의무화

기존: 대기업→1차 협력사 ⇒ 개선: 1차→2.3차 협력사

- 인센티브 등 부여, 확산 추진

상생결제 세액공제율 확대 + 중견기업 동반성장평가 신설

성과 공유기반 강화

- 기술탈취 근절 3종 정책 도입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 분쟁조정 효율화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 공익법무단 운영

- 정부 매칭 통해 공동 연구개발 투자 확대(6,500억원, 누계)

민간 50% + 정부 50%

- 상생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2천개) 및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22)

실천과제 2 기업–근로자간 : 근로보상 강화 통해 소득 증대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성과공유 기업 10만 확산' 추진



-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인센티브 강화



- 성과공유 모범사례를 선발하여,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포상 · 홍보 · 우대 지원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3~5년) 강화

5년 이상 연계시	기업	연구 · 인력개발비 25% 세제감면 등
	근로자	근로소득세 50% 감면
7년 이상 연계시	근로자	만기 장려금 400만원 추가 지원

-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추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 연구 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R&D 내일채움공제' 신설

실천과제 3 수도권–지역간 : 특별지원 등을 통해 균형 성장 촉진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편

- 산업 구조조정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해 집중 지원하여, 조기재해 극복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지정범위	산업단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행정구역 등 추가
지정기준	낙후정도	재산손실, 매출축소 등 경제적 피해 추가
지원내용	세제 · 융자 등	소상공인 자금, 사업전환 등 추가 지원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 지역 중심으로 신산업의 규제없는 기업활동 유도
  - 시 · 도 신청 ⇒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 검토



지역 주력산업 재편 및 집중지원

-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 재편

주력산업 63개 (융복합 비중 22%) → 주력산업 48개 (융복합 비중 69%)

- R&D–시제품제작–기술지도 등 중점지원('18, 1,6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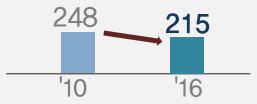
셋째

소상공인 · 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 자영업자 600만 시대, 그러나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상황

• 수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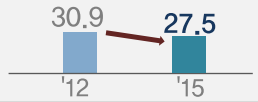
* 1인당 월평균 영업이익(만원)



* 통계청

• 낮은 생존율

* 창업 5년 후 생존률(%)



상권 내몰림, 임대료 부담

- (K 상권) 맛집, 카페 등 창업 확대로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나,
  임대료가 70%이상 상승 →
  기존 상인들 상권에서 내몰림

정부 지원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한계

* 5조원 예산 투입 후 전통시장 매출(조원)



* 중기부

소상공인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 보호

실천과제

① 수익 올려주기

② 생업 터전 지켜주기

③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 혁신



실천과제 1 소상공인 수익 올려주기

소상공인 수익 · 성장 촉진

- 혁신형 소상공인 집중 육성('22, 1.5만개)

혁신형 소공인	백년가게
▪ R&D, 홍보 · 마케팅 지원 ▪ 성공사례 공유 및 확산	▪ 가업승계 조세지원 ▪ 브랜드 · 디자인 지원

- 협동조합 협업촉진 및 규모화를 통한 성장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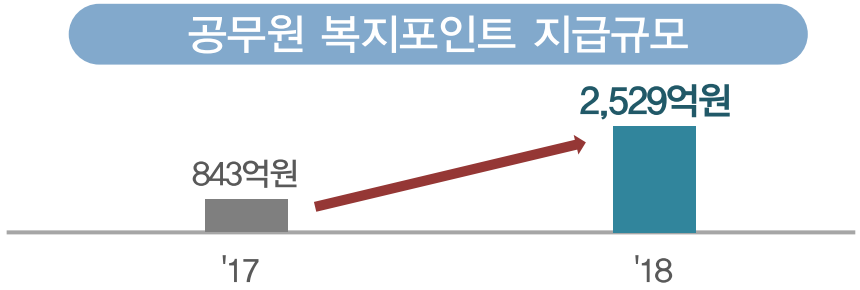
– 유형별(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차등화로 선도 · 체인형 조합 집중 육성

– 공동사업, 공동장비, 판로, 성장자금 등 패키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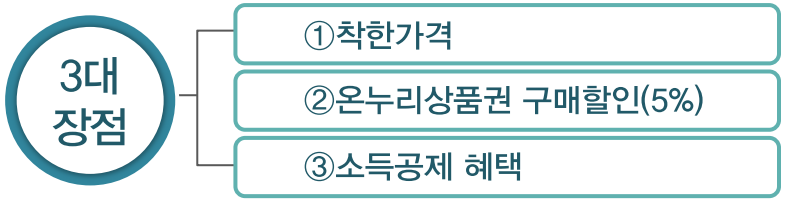
-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발굴 · 개선('18.상)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 공무원 복지포인트 연계 확대(10 → 30%)



- 온누리상품권의 3대 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기업의 구매 동참 유도



-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유도

실천과제 2 소상공인 생업 터전 지켜주기

복합쇼핑몰 · 전문점 등 규제 신설

-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 영업규제 신설

월 2회 휴업 + 0시 ~ 오전 10시 영업 제한

- 대규모 점포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

현행	개선
전통시장, 슈퍼마켓	의류소매점, 음식점 등 추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환산보증금 상향
  →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 내몰림 보호 목표

- 임대료 과다인상 등 방지장치 도입
  -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 인하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 10년) 등

- 전통시장 지원 시 임대 · 임차인간 상생협약 의무화
  (2년간 임대료 동결, 이후 3년간 2%내 인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보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상)
  * (법률안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대기업 진입 · 확장 금지

- 업종 특성을 감안한 비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 업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공동·협동화 지원, 업종공통 R&D 등 지원방안 마련('18.상)

실천과제 3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 혁신

상인주도형 활성화 프로젝트 신설

- 상인 주도로 변화, 혁신을 꾀하는 전통시장
  우선 지원방식으로 전면 개편
  – 독창적인 아이디어, 고객 감동형 시설 등 상인 제안 프로젝트 집중 지원 (25곳)

전통시장 지원방식

기존	개편
정부주도 하향식(Top-down) * 아케이드 · 비가리개 등 지원 유형을 정부가 제시하는 방식	시장 · 상인 주도 상향식(Bottom-up) * 상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 하여 제안 →정부가 뒷받침

- 특성화 첫걸음시장 지원 사업 추진 (60곳)

화재걱정 없는 시장 만들기

- 화재안전 개선계획 없는 시장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배제 원칙 ('18, 788억원)
-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 및 속보장치 보급
- '20년까지 안전취약시장 300곳 노후전선을 일괄정비 ('18년 100곳 우선 정비)
- 전통시장 안전지킴이(83명) 임명 · 운영

매주 1회 이상 점검 → 안전취약 요인 발굴 · 공유 → 즉시 해소



넷째

정책 및 업무 혁신

실천과제 1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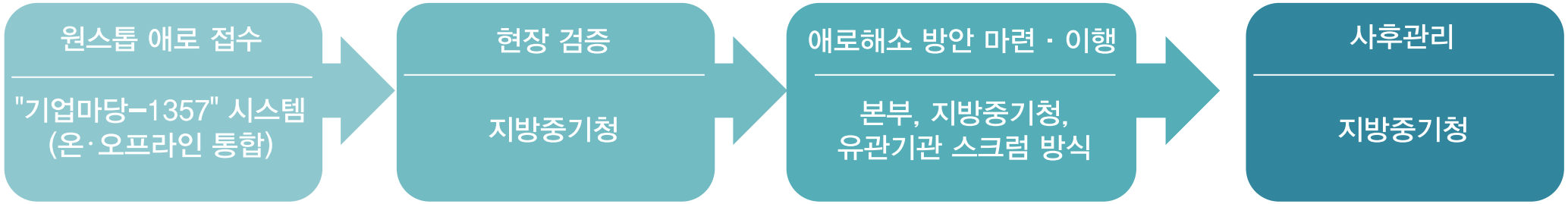
1 데이터에 기반 하여 R&D–자금–인력–마케팅–수출까지 일관지원체계를 통해 원스톱 지원

–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데이터 기반하여 일괄 지원



2 현장 중심의 행정구현

– 직접 업계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 집단이 아닌 개별고객을 관리



실천과제 2 정책 혁신을 통해 효율성 제고

1 복잡 · 다양 · 중복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폐합 등 구조개혁 추진('17년 1,347개 사업)

2018년 1단계
중기부 소관 사업 기업 관점에서 평가
→ 중복사업 제거 등 구조개혁 추진

2019년 2단계
정부 지원사업 기업 관점에서 평가
→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신설 통폐합 등 구조개혁(기재부 협업)

2020년 3단계
지자체 지원 사업 평가 및 조정 추진

2 '민간 주도– 정부 후원' 으로 개편

투자	민간이 투자분야를 선 제안 → 정책목적에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 매칭
전통시장	상인이 창의적 프로젝트 제안 → 정부 지원
R&D	벤처투자 받은 기업에 R&D 자금 연계 지원

3 정책 신규 진입 확대 및 부담 완화

첫걸음기업 지원	분야별 정책 처음 참여기업 전용 프로그램 신설
기업자율상환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책자금 상환 허용 (청년전용창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시범적용)
조기 상환 허용	정책자금의 조기상환 페널티 전면 폐지

실천과제 3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 구축

혁신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아무말 대잔치
- 온라인 기반 익명 혁신 제안 시스템 운영

업무혁신 경진대회
- 직원 누구나 참여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개 경쟁 제도 운영 (우수 아이디어 포상)

집단 지성 활용

정책공유회 + 다면평가

주요직위 후보자와 업무토론,

후보자에 대한 다수의 평가

⇒ **최적직원 임명**

집단논의

중요 정책에 대해

스크럼 방식으로

간부들이 참여하여 결정

업무 부담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

원클릭 줄이기
- 보고서 간소화, 작성 시간 단축
  ⇒ **내용에 집중하는 문화 조성**

가정 친화제도
- 주말·공휴일 근무 제한, 연가 소진 의무화, 유연근무 활성화 등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화재, 지진 등 실제 발생가능한 상황 상정

↓

숙달될때까지 주기적 직접 훈련

* 911 테러시 모건스탠리 직원들은 평소 반복적인 재난 훈련으로 대다수(2,687명) 생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